

“노조 할 권리 미룬다면 노정교섭 전면 재검토”

16일 민주노총 결의대회...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법 전면 개정, 노동적폐 청산 요구

민주노총이 16일 14시쯤 청와대 인근 서울 효자동 치안센터 앞에서 6백여 조합원이 참가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어 노조할 권리와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을 요구하며 전 조직투쟁과 결의를 밝혔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문재인 정부는 노동기본권을 놓고 노정교섭을 요구하니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가 계속 이런 태도라면 민주노총은 노정교섭, 노정관계를 전면 재검토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다”고 경고했다.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부위원장은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없애

겠다 해놓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돈이 없어 비정규직 만드는 것이 아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노동의 미래 문제”라고 주장했다.

앞서 금속노조는 이날 13시 무렵 같은 장소에서 ‘교섭창구단일화제도 폐기, 노조과외 금지, 노조 할 권리 쟁취를 위한 금속노조 사전대회’를 열었다.

오상룡 사무처장은 “우리 손으로, 노동자의 투쟁으로 온전한 노동 3권을 쟁취하자”고 호소했다.

김정태 노조 대전충북지부장은 “교섭창구단일화제도와 복수노조로 지부가 어떻게 망가지는지 똑똑히 봐왔다”며 “이 제도를 두고서는 노동3권이 보장

되는 노조활동을 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종균 경남지부 한화테크윈지회장은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오히려 노조할 권리를 침해하고 민주노조를 파괴하는 제도로 악용된다”며 “이번 노동법 개정요구는 내 삶과 우리 권리를 지키는 투쟁”이라고 호소했다.

양대노총 제조연대, ‘제조산업발전특별법’ 입법발의

13일 국회 기자회견... “제조업 기반 닦는 사회역량 모아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제조부문 노동조합 연대체인 양대노총 제조연대(아래 제조연대)가 제조업 부흥과 제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조산업발전특별법’ 입법발의에 나섰다.

새민중정당 김종훈 의원과 제조연대는 9월 1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조산업발전특별법을 입법 발의한다고 알렸다.

김종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특별법은 ▲제조산업 발전전략과 기본정책수립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가칭 제조산업협의회) 구성 ▲4차 산업혁명 시대 제조업의 위기극복과 고용창출을 위한 제조업발전기금 조성 ▲대규모 구조조정(정리해고)을

현명하게 극복하기 위한 지역(업종)별 노사정 협의기구 구성 ▲외국투자기업의 기술유출, 먹튀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조치 등을 담고 있다.

금속노조를 비롯한 민주노총이 산업통상자원부 등 문재인 정부와 제조산업발전특별법 구체 내용을 놓고 노정교섭에서 협의에 나설 전망이다.

“노조파괴 목적 손해배상청구 제한하라”

11일,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연대 조합원 20억 원 손해배상판결 상고 기자회견

노동법률 단체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손해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아래 손잡고) 등은 9월 11일 대법원 앞에서 ‘현대차 비정규직 연대자에 대한 20억 원 손해배상판결 대법원 상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 위해 손해 가압류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라고 썼다. 현대차 동차 비정규직의 경우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취하하면 손해배상에서 빼주겠다고 회유하고, 끝까지 권리를 주장하는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이 남았다.

이들은 20억 원 손해배상 사건을 계기로 노동자 파업에 무차별 업무방해 적용과 손해배상, 업무방해 방조죄 적용 문제를 사회적으로 논의하고, 대법원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에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로 남용했다”라며 사용자들의 보복 권리남용 사례를 조목조목 꼬집었다. KEC는 3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KEC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회사 문건을 보면 ‘노조를 압박하기 위해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를 하자’ 라고 적고 있다. 유성기업도 노조파괴 문건에서 ‘탈퇴자를 늘리

부산고등법원은 지난 8월 24일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가 2010년 11월 15일부터 25일 동안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벌인 파업을 지원한 당시 조합원 네 명에게 20억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항소심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금속노조 조합원을 비롯해 시민, 사회단체 모금으로 1천5백만 원이 넘는 상고비용(인지대)을 마련했다.

법률단체 대표로 발언에 나선 금속법률원 김태욱 변호사는 “사용자들은 이명박 정부 이래 노조와해와 조합원 괴롭힘을 목적으로 쟁의행위

에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로 남용했다”라며 사용자들의 보복 권리남용 사례를 조목조목 꼬집었다. KEC는 3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KEC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회사 문건을 보면 ‘노조를 압박하기 위해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를 하자’ 라고 적고 있다. 유성기업도 노조파괴 문건에서 ‘탈퇴자를 늘리

법원과 검찰, 노조파괴 현대차 엄벌할까?

유성기업 노조파괴 현대차 엄벌 촉구 기자회견...법원, 유시영 감형-검찰, 임시건강진단 내사 종결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노조파괴를 주도한 현대자동차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금속노조가 “노조파괴 진짜 주범 현대차를 엄벌하라” 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금속노조와 충남지부, 유성기업지회는 9월 12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앞에서 ‘유성기업 노조파괴 지시한 현대차 엄벌 촉구 기자회견’ 을 열었다.

다. 법원과 검찰이 법과 상식에 따른 판단을 할 수 있을지 우려한다” 라고 지적했다.

대전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8월 14일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에겐 1심 선고 징역 1년 6개월-벌금 200만 원 보다 낮은 징역 1년 2개월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청 천안지청은 유성기업이 천안고용노동지청이 올해 1월 내린 임시건강

진단 시행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는데 내사를 종결하라고 수사 지휘했다.

노조는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적폐’ 의 핵심은 자본과 권력의 유착” 이라며 “검찰과 법원은 유성기업 노동자, 금속노조 17만 조합원, 적폐 청산을 염원하는 전국 시민사회가 오늘 시작하는 재판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라고 경고했다.